

# “교육의 어려움은 교육부 권력놀이 탓”

### 김승환 교육감 “교육은 교육부 관료를 위해 존재해 왔다… 새 정권은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 수립해야”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27일 “지금 대한민국의 교육이 어려움에 처한 건 교육부 탓이 크다”며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지 못한 채 권력놀이만 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육부가 최근 폐지론이 불거지자 자신들의 조직개편 방안에 대한 정책연구를 발주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교육계를 우롱하는 짓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진정으로 과거를 참회할 마음이 있다면 교육부를 해체하는 방향으로 용역을 주는게 맞다. 그런 다음 국민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겸허한 자세다”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으로 6년8개월 일하면서 확실히 느낀 것은 교육부가 교육을 정치적 시너 역할로 만들고 정치가 교육을 지배하도록 통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입법자는 지방교육자치를 선언했는데 교육부는 교육을 중앙집권체제로 되돌리고 오히려 더 강화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면서 대표적으로 국정역사교과서 강행을 꼽았다.

특히 “교육부는 전북교육감 한 사람에게 무려 8차례 검찰에 고발하는 등 시도교육감 갈등이식 고발을 남발해 왔다. 또 특별교부금으로 시도교육청을 통제하려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교육부의 교육정책도 시대에 전혀 맞지 않다고 밝혔다. 지금 선진국은 모두 협력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교육부는 경쟁교육체제를 강화하는 시대역행적인 교육정책을 계속해왔다는 것.



황교안을 규탄한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연장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특검연장 거부 황교안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교육비와 관련 “사교육비가 계속 늘어나는 1차적 원인을 교육부가 제공해 왔다. 그 수단이 바로 교과서다”라고 비판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교육은 교육부 관료를 위해 존재해 왔다. 그래서 교육현장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고 진단했다. 김 교육감은 “지금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은 미래 대비 교육, 미래 이해 교육이다. 알파고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미래교육은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를 강요하고 있고 2030년까지 전세계적으로 사라지는 직업이 대략 2억개나 될 것이다. 이런 격변의 시대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 김 교육감은 “다행히도 금년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새로 들어오는 정권은 시대에 맞는 교육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 변화의 시기에 우리 교육계가 정말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육으로 완전히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 정운천, 바른정당 최고위원 임명



정운천 의원이 바른정당 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바른정당은 최고위원회를 열어 공식 중진 두 명의 최고위원 임명을 논의했으며, 정운천 의원을 최고위원으로 임명했다.

정운천 의원은 전주에서 보수정당 후보로서 32년 만에 당선된 의원으로 바른정당이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과거 농식품부장관 및 최고위원을 역임한 경험으로 중량감 있는 정책 추진까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최고위원으로 임명된 배경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 의원은 “최고위원까지 선출돼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역균형 발전은 물론이고 한국 정치가 지역적으로 균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담보 상태에 빠져있는 바른정당의 위기를 호남의 지지세 확장을 통해 기회로 바꿔 보수정권 재창출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인재용 기자

### 김춘진, “황교안 권한대행 책임자 모습 보여야”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재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백색테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세력들을 내란선동 혐의로 즉각 잡아들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평화시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로 탈바꿈한 오늘 날에도 해방 이후 서북청년단 식의 백색테러 위협을 방관해서야 어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모습이나”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상황에서 국민 80% 가량이 원하는 특검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당 식으로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이라며 “황 대행은 국정농단이 벌어질 당시 법무부장관과 총리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즉시 내일로 종료되는 특검 연장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 황 대행 “특검 수사 연장 불허… 검찰에 넘겨야”

### 문재인 “국민에 대한 도발”... 야4당, 새 특검법안 추진... 특검팀 “공소유지 만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7일 박영수 특검법안의 수사기간 요청과 관련,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무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계자를 통해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특검 수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인력이 투입됐다. 총 115일 수사가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최신실 등 특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사건들의 핵심 당사자와 주요 관련자들에게 대해 이미 기소했거나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수준으로 수사가 진행돼 특검법의 주요 목적과 취지는 달성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했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이 특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며 “고심 끝에 지금은 특검을 연장하지 않고 검찰에서 수사를 계속하도록 하는 것이 국정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에 반발에 나섰다. 문재인 전 대표는 27일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거부한 데

해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끝까지 나쁜 총리”라며 박근혜 대통령과 황 대행을 싸잡아 비난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은 수사를 거부했고 총리는 특검 연장을 거부했다.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에서는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과 정의당 등 야당은 27일 황 권한대행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새 특검법안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주승용, 바른정당 주효영,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원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3월 임시국회 소집에 4당이 합의해 이를 자유한국당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야당 원내대표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추진 공조 여부에 대해선 합의하지 못했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은 이와 관련, “황 대행 탄핵 문제는 오늘 바른정당을 제외한 3당은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특검팀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연장 거부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며 “남은 수사기간 마무리에 철저히 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으면서 첫 발을 뒀다. 이후 현재까지 전·현직 장관급 인사 5명과 삼성전자 이재용(49) 부회장 등 13명을 구속하고 13명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뉴스

국립전주박물관, 유네스코 음식향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